

# 尹 대통령·이재명 대표 오늘 첫 소통... 대화 물꼬 틀까

###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앞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윤 정부 출범 후 첫 제1야당 대표와 만남... 협치 계기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난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환담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이 여야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협치의 물꼬를 틀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환담 모임을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사전환담에서의 만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만남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작년에는 민주당이 야권을 향한 검찰·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수사 및 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사전환담에서 양측의 만남도 불발됐다.

올해 시정연설 사전환담도 이 대표의 참석은 불투명했고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데다 사전환담이 5부 요인(대법원장·헌법재

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까지 함께하는 자리여서 국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한'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참석을 결정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소통과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며 '책임 야당'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때면 사전환담에 참석하는 건 국회의 오랜 관례인데, 이 대표가 2년 연속 불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서도 사전환담장에서 두 사람의 소통에 기대감을 표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계기는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특히, 민생에는 여

야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까지 아울러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시정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날 회동이 여야 관계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

을 굶기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무는 공부냐, 그냥 밥에 일어나 가져' 이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환담에서 민생을 주제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여야 간의 관계도 한층 부드러워질 것"이라며 "정치는 생물이란 점에서 이날 환담이 소모적 정쟁의 종식을 알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태원(맨 오른쪽) 1주기 국회 추모제 김진표(맨 오른쪽)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욱(왼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왼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 “예산안, 대통령실 관여하면 협의 않겠다”

### 민주당 의총... 홍익표 “민생현안 우선하고 국회 심사권 존중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지난해처럼 대통령실에서 ‘감 놔라 콩 놔라’ 하는 식으로 예산 심사할 생각이라면 여에 여당과 협의의 자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만약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못 지키고, 원만히 합의되지 못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야당과 국민적 요구가 있는 민생현안 대책을 반드시 가져오고, 또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존중하라”며 “이 두 가지 원칙이 전제되면 우리도 법적 심사 기일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이른바 ‘4대 국정

조사’(감사원 정치감사-서울-양평 고속도로 특별·해병대원 사망사건-방송장악) 방침을 공유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국정조사와 함께 당내에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권력기관 특별비(특수활동비)와 관련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도 더 확대·개편해 11월 중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앞서 여야는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에서 피켓 사용·야유·고성 등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기에 본회의장에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하라”

### 민주 광주 국회·지방의원 회견... “소상공인 위기 극복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광주 지방의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만(비례) 국회의원과 강수훈(서구1)·이명노(서구3) 시의원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국민 78%와 자영업자 84%가 정부 지원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에도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가 3525억원의 증액 반영한 결과 올해 총 8조8000억원의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했다”며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또 “소상공인 보증 여러 확보를 위해 현재 보증부대출 잔액의 0.04%에 불과한 금융회사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시켜야 한다”며 “10년간 금융기관이 2조4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만큼 현행법상 상한인 0.1%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최근 광주시가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별 보증 상환유예’ 협약을 통해 대출 거치와 원금 상환 기간을 1년간 유예한 사례를 들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광주형 소상공인 성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광주시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최권일 기자 cki@

## 민주 “日 후쿠시마 인근 수산·가공품 수입 금지법 추진”

### 원산지 표기 강화·국제해양법재판소에 日 제소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산 가공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총괄 저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대책위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회견 담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책위는 국민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위성근 의원은 이와 관련,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원산지 표기에 ‘형’ 단위 지역도 포함하게 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히 사는 게 인

권의 문제고 오염수 방류가 이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며 “마르코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국회 차원에서 초청해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일본이 각국이 간접적으로 해양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오광목 기자 kroh@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